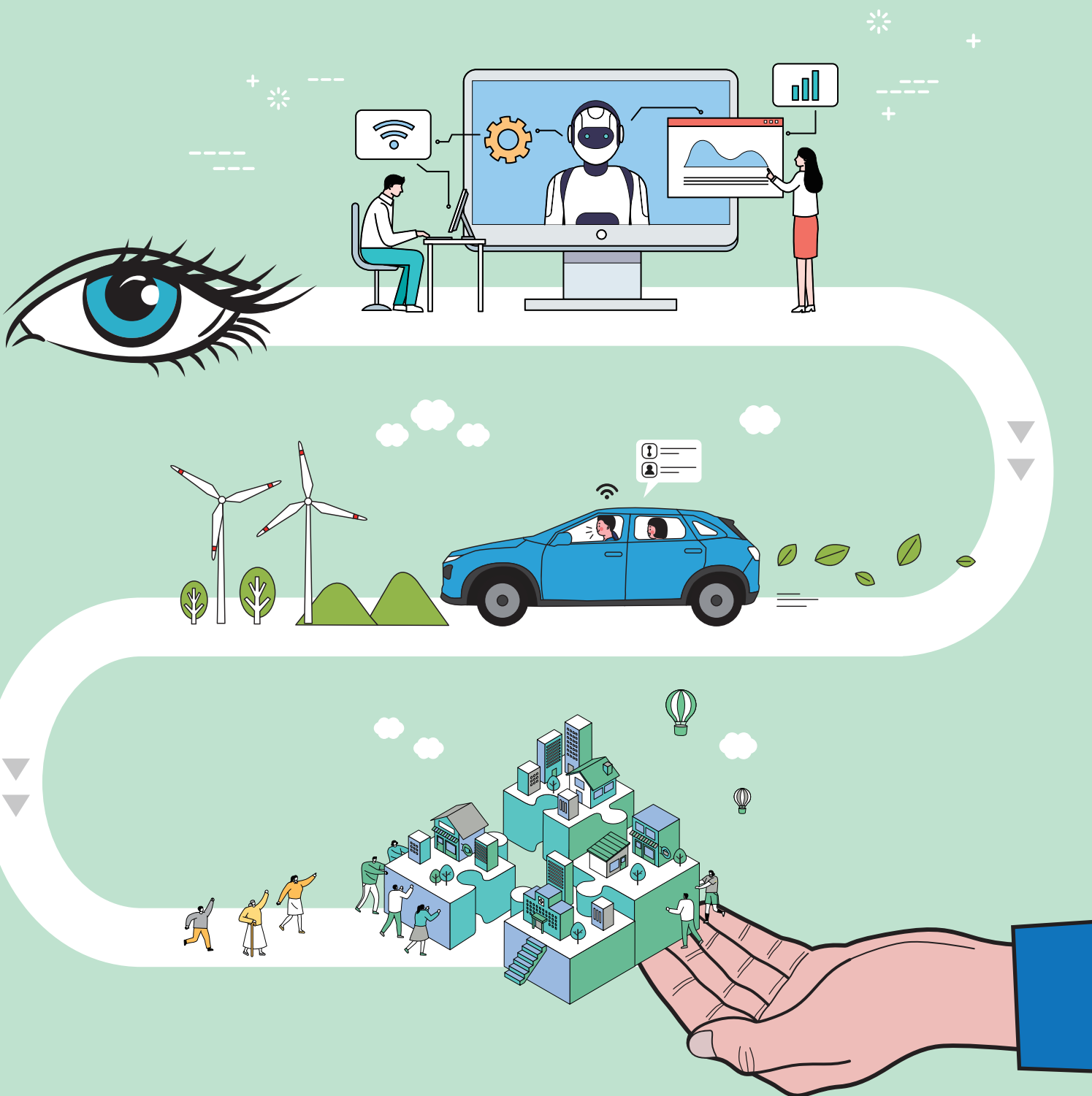


2021년도 지방자치단체의 적극적인 규제혁신 우수사례 **첫 번째** 이야기

규제혁신, 관심 어린 눈길에서 시작해서 따뜻한 손길로 완성됩니다.



행정안전부

인천시
남동구



개발제한구역 내 전기차 충전소 허가기준 수립

종전



개발제한구역 내 전기차 충전소 설치에 대한 구체적 기준이 없어
법령개선에도 불구하고 전기차 충전소 설치 미진

개선



전기차 전기공급시설 입지 타당성 조사용역을 거쳐 「남동구
개발제한구역 내 자동차 전기공급시설 입지 기준 및 행위허가
기준」을 고시('21.1.4.)

효과



전국적으로 개발제한구역 내 전기차 충전소 확대 보급 발판을
마련하고, 행정의 투명성을 높여 재량권 남용 여지를 최소화



고령자도 쉽게 디지털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가이드라인 마련

종전



비대면 디지털 서비스 수요는 폭증하고 있으나 정보격차 해소
지침은 장애인 항목 위주로 제시되어 고령자의 정보접근성 저하

개선



고령층의 특성을 고려해 콘텐츠 유형(PC, 모바일, 영상)별 이용
장애요인을 분석하여 「고령층 친화 디지털 접근성 표준 및 적용
가이드」를 개발('20.12.)

효과



용산노인종합복지관 등 서울시 내 35개 복지관 등 전국 공공기관의
디지털 콘텐츠 개발 및 관리 영역에 확대 도입하여 디지털 포용
환경 조성

경기도
부천시



토지보상금, 납세증명서 없이도 신속 지급

종전



토지소유주가 세금 완납 후 각종 권리관계를 말소해야 토지보상 계약이 가능하여 계약 지연에 따른 공공개발사업 차질

개선



토지보상 계약을 먼저 체결한 후 권리관계 말소 등 소유주의 이행 조건을 자치단체에서 일괄하여 정리하고 잔여 보상금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전환

효과



토지 소유주가 권리관계 해소를 위해 여러 기관을 방문할 필요가 없고 자금도 필요가 없어 토지보상 계약률이 높아지고 공공개발 사업 신속 추진이 가능

경상남도



신도시와 구도심 상생발전 모델 제시로 청년·신혼부부 반값 임대주택 확대

종전



신도시 개발로 인해 구도심 지역은 상대적으로 낙후되고 청년인구 유출이 가속화되는 공동화 문제 발생

개선



지방공기업이 신도시와 구도심의 결합도시개발방식을 추진할 때 토지소유자 동의 절차를 간소화하고 구도심에 청년·신혼부부 반값 임대주택을 제공하는 경우 신도시 개발지역 용적률을 최대 10% 추가 상향할 수 있도록 「경상남도 도시개발 조례」 개정(20.12.31.)

효과



신도시 개발이익을 구도심에 재투자하는 상생발전 모델을 정립하여 주민 간 갈등을 완화하고 지역 청년·신혼부부의 주거환경도 개선

충청북도
옥천군

과태료
처분 완화



경미한 「자동차관리법」 위반에 대한 무분별한 과태료 처분 완화

종전



차량 블랙박스 보편화로 불법등화장치, 번호판 훼손 등 「자동차관리법」 위반사항 신고가 급증하여 고의·과실 여부와 무관한 과태료 처분으로 관련 민원 폭증

개선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상 고의과실 여부 없거나 위법성 착오 시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는 규정을 적극 준용하여, 경미한 「자동차관리법」 위반행위에 대해 원상복구 요청 미이행에 대해 과태료 부과하는 방식으로 제도 개선

효과



과태료 부과 이전에 주민 스스로 위법행위를 인지하고 대응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여 과태료 체납 증가 방지 등 행정 효율성 제고